

세계 평화운동 동향 :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도시들의 호소(Cities Appeal)’ 운동

NPT&TPNW 연구모임

국제핵무기반대운동(ICAN)은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대한 각국 정부의 서명과 비준을 이끌어내기 위한 운동의 하나로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도시들의 호소(Cities Appeal)’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시들의 호소’는 크고 작은 도시(지방자치단체)들이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중앙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캠페인이다.

2020년 4월 현재 핵무기금지조약을 지지하는 도시는 300개(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캔버라, 토론토, 파리, 베를린, 히로시마, 나가사키, 제네바, 바르셀로나 등)에 달한다. 핵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를 촉

구하는 한국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견인하기 위한 풀뿌리 대중운동이 필요하다. 핵무기금지조약 서명운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도시들의 호소’를 위한 호소문(모델) 및 지지체나 지방의회에 보내는 요청서한(모델)을 번역, 소개한다. 심신아 회원이 번역하고 NPT&TPNW 연구모임에서 내용을 다듬었다.

ICAN Cities Appeal 주요도시 (16 개국 300여개 도시 : 2020. 4. 25일 현재)

- 호주 : 캔버라, 멜버른, 시드니 등
- 캐나다 : 토론토, 밴쿠버 등
- 프랑스 : 파리 등
- 독일 : 베를린, 뮌헨, 포츠담 등
- 인도 : 칸 누르 등
- 일본 :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 노르웨이 : 오슬로
- 스페인 : 바르셀로나 등
- 스위스 : 제네바, 취리히 등
- 영국 : 맨체스터, 옥스퍼드 등
- 미국 : 캘리포니아, 버클리, 브루클린,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워싱턴 등

‘도시들의 호소’ 취지

핵무기는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을 가한다. 이것이 2017년 7월 7일, 122개 국가가 유엔에서 핵무기금지조약 채택을 의결한 이유다. 각국의 정부는 핵무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불법화하고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의 토대를 놓는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

하기를 요청받고 있다. 각국의 도시들은 국제핵무기반대운동의 '도시들의 호소'를 채택함으로써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지지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왜 도시인가 ?

핵무기는 대다수의 경우, 공격의 주요 목표가 되는 도시에 특정한 위협을 가한다. 핵무기는 목표물에 광범위한 피해를 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것은 경쟁국가의 핵심시설에 대한 핵 위협의 본질이며, 이는 핵보유국 9개국들과 핵무기 사용을 지지하는 수십 개국의 국가들에 의해 합법적인 방위전략으로 홍보되는 핵억제 이론과 관행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나라들은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다다랐던 일촉즉발의 상황과 오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그 기반부터 무너져온 이 전략에 동의하면서 시민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핵무기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의무가 도시에 있는 것이다.

도시의 참여는 국민의 의지에 부응해야 할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도시들이 정부에게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할 때, 시민들이 대량살상무기를 반대하고 있고, 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상기된다. '도시들의 호소'에 대한 지지는 이러한 목소리를 증폭시킬 것이며, 또 정부가 핵무기와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이웃국가들이 그 선례를 따르도록 만든다.

'도시들의 호소'를 지지하는 방법

'도시들의 호소'는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지자체를 위한 것이다. 지자체 장이 아래의 '호소'에 대한 지지 입장을 국제핵무기반대운동(ICAN) 메일 info@icanw.org로 보내면 된다. 이외 국제핵무기반대운동이 제안하는 지자체 장이 할 수 있는 추가적 행동은 아래와 같다.

1. 외교부 장관 혹은 다른 정부 부처에 '도시들의 호소'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리는 편지 보내기
2. 핵무기금지조약 서명과 비준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대 언론 발표
3. 핵무기의 위협과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중 전시
4.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경우, 핵무기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국제핵무기반대운동(ICAN)에서 추진하는 ‘도시들의 호소’ 운동의 호소문 전문을 번역한 것은 아래와 같다. (각 도시의 시장들은 아래 호소문에 서명하여 ICAN에 보낸다.)

“우리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가 지역사회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 살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 어떤 핵무기의 사용이라도 그것이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간에 그것은 인류와 환경에 재앙적이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비극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17년 UN에서의 핵무기금지조약 채택을 열렬히 환영하고, 우리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Our city/town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grave threat that nuclear weapons pose to communities throughout the world. We firmly believe that our residents have the right to live in a world free from this threat. Any use of nuclear weapons, whether deliberate or accidental, would have catastrophic, far-reaching and long-lasting consequences for people and the environment. Therefore, we support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nd call on our governments to sign and ratify it.”

.....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기, 가족과 지인들에게 서명운동 안내하기, SNS 홍보 및 캠페인
 - 한국에서의 핵무기금지조약서명운동은 2019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발기하고, 30여개 단체가 공동추진단체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2. 아래의 편지 모델을 참조로 시 의회나 군수, 시장, 도지사 등에게 ‘도시들의 호소’를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쓰기
 - 아래의 편지 모델은 국제핵무기반대운동(ICAN)의 편지 모델을 참고로 평통사와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발기한 ‘핵무기금지조약 국제서명운동’ 제안문 내용을 그대로 살려 작성하였다. 

시장님께 드리는 편지(모델)

발 신 : XX를 대표하여 000

수 신 : 시장 또는 담당 공무원의 이름

제 목 :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지지 표명 요청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대한 지지와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는 '도시들의 호소(Cities Appeal)' 운동에 대한 시장님의 지지를 요청 드립니다.

도시는 핵무기의 주요 표적이고 지자체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과 사용 위협을 불법화한 핵무기금지조약을 지지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주민과 지역사회운동과 아주 밀접한 연계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와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는 핵무기 제거를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도록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님이 '도시들의 호소' 운동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핵무기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금지하고 제거하는 국제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해 70만 명의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24만 명 사망)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폭자 중 한국인이 7만~10만 명(4만 명 사망)이나 됩니다. 살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다수는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가난과 냉대, 국가적 방치 속에서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다 죽어갔습니다. 후손들도 원폭 피해의 유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죽거나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배와 수탈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인류와 지구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염원입니다. 지금도 미국, 러시아 등 핵무기 강대국들은 인류를 수십 번도 더 절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1만 2천 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세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민족과 국가는 공멸합니다.

2017년 7월 7일, 유엔총회에서 사상 최초로 핵무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핵무기금지조약이 채택되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통해 수십 년간의 핵군축 교착상태를 끝내고 핵무기의 폐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핵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정부는 즉각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 원폭 피해자의 한을 풀어 주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및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중앙 정부에게 핵무기금지조약 서명과 비준을 촉구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